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Since 2002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이명남 조연상 공동운영위원장/ 안성호 이상선 이숙자 표정렬 기획위원장/ 박경 정책위원장/ 육동일 집행위원장/ 김제선  
301-730 대전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03호 T042)256-8032 F252-6976 담당/ 박상우(016-440-6529, ngotj@korea.com)

**제3차 운영위원회**

『**행정수도 이전**』  
**효율적 추진을 위한 내부세미나**

▶때 : 2003년 1월 21일(화) 18:30

▶곳 :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교육실

☐ 개 회 ..... 사회 : 이상선 공동운영위원장

☐ 인 사 말 ..... 조연상 상임공동대표

☐ 참석자 소개

☐ 행정수도이전 효율적 추진을 위한 내부세미나

▲ 주제발표 : 강현수 교수(중부대 도시계획학과) “향후 행정수도 건설 추진 방향 제언” /2p

▲ 지정토론 : 이덕복 박사(토지공사 토지연구소) “신정치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과 기본과제” /12p

▲ 지정토론 : 김종구 교수(중부대 도시계획학과) “수도기능이전의 개념적 범위와 방법 및 절차” /18p

▲ 자유토론 : 참석자 전원

☐ 광 고

☐ 폐 회

☐ 참고자료

▲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조직개요 및 현황 /26p

▲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활동일지 /27p

▲ 회의결과(대전충남 2차 운영위,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운영협, 2003년도 워크샵, 지방분권특위) /29p

▲ 1.2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 지방분권 개혁요구안 (수정前 자료임) /35p

# 향후 행정수도 건설 추진 방향 제언

강 현 수(중부대 도시계획학)

\* 본 내용은 전적으로 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내용의 작성에는 박 경 교수님이 이미 제안한 내용들 일부를 참조하였음.

## □ 현재까지의 경과 요약

###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 공약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을 대통령 선거 핵심 공약으로 제시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은 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고, 대신 기능별 수도론을 제시.
- 행정수도 건설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유력 후보간 치열한 쟁점거리로 대두

--> 대선 과정에서 행정수도와 관련된 주요 비판 내용

충청권 표심을 겨냥한 실현 불가능한 정략적 선거용 과다 비용 지출 수도권 공동화 및 부동산가격 폭락에 의한 경제위기 도래 통일 대비 유보 필요
--

### - 대선 결과 노무현 당선자가 당선

행정수도 관련 직접 이해당사자들인 수도권과 충청권 양 지역에서 압승

--> 행정수도 건설 공약은 수도권과 충청권 유권자 양 쪽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석가능  
또한 행정수도 건설 공약은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 가능

### ◎ 지방분권 운동의 점화

- 한편 각 지역에서는 지방의 위기를 타개하고,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을 분권과 분산형으로 전  
환시키자는 취지의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을 발족.
- 지방분권국민운동에서는 유력 대선 후보들과 지방분권을 위한 국민협약 체결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작년 12월 6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와 12월 8일 체결
- 국민협약 체결 주요 내용
  -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등

#### ◎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경과

- 충청권 행정수도 입지 예상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투기 우려  
-> 건교부는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청지역 6개 시 및 5개 군 19억평을 토지  
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당선자 10대 국정과제로 선정.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는 방안 검토.  
-> 현행 시도지사협의회를 대체할 국토균형위원회 신설 검토
- 대전 및 충남 충북 지자체 행정수도 유치 경쟁 촉발 및 자제 분위기  
-> 대전, 충남, 충북 지방분권 연대 공동 협력 다짐 성명 발표  
-> 대전시장, 충남, 충북지사 모임 : 3개 시도가 협력과 공조 다짐

#### ◎ 향후 행정수도 건설 관련 진행 사항 전망

- 행정수도 건설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단 구성 (취임 직후)
- 추진단 활동 (취임후 1년 기간)
-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취임후 약 1년 경과후)

- 신행정수도 입지 확정. 토지 매수 착수
- 구체적 도시 건설 프로그램 및 도시계획 확정
- 도시기반시설 건설
- 공공청사 및 주거단지 건설
- 순차적 행정 기능 이전

□ 행정수도 건설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

- 행정 수도 건설 자체에 대한 반대와 저항  
(다양한 측면의 반대 이유와 다양한 형태의 저항 가능)
- 부동산 투기와 개발 이익 독점. 주택, 토지 가격 상승
- 충청권 내 지나친 유치 경쟁으로 인한 갈등

□ 향후 행정수도 건설에 있어서 견지해야 할 원칙

- 행정수도 건설은 당선 후 폐기되어 버리는 공약(空約)이 아닌, 반드시 임기 중에 가시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핵심 프로젝트가 되어야 함.
- 행정수도 건설 과정에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었던 만큼 실질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투명한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 행정수도 건설은 단독으로 분리된 사안이 아닌, 국토균형발전, 21세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건설이라는 더 큰 국가적 목표를 위한 강력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함.
- 행정수도의 구체적 입지 선정 발표 이전에 행정 수도 건설의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즉 선 국민적 합의, 후 입지 확정 발표 순으로 진행되어야 함.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충청권의 역할

- 대선 과정에서 이미 이번 행정수도 공약이 즉흥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충청권 표심을 겨냥한 정략적, 돌출적, 선심성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 앞으로 충청권에서는

첫째, 충청권 내부에서 정파간 이해 관계를 초월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입장 통일 필요

둘째, 행정수도 건설의 가장 강력한 추진 주체가 될 청와대에 대한 견인과 지원

셋째, 행정수도 건설이 충청권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당위성 적극 홍보

수도권 지역 및 영호남 강원 지역 설득 논리 개발로 충청권 이기주의에 대한 역풍 방지

--> 일부 행정 기능의 타 지역 배분 및 수도권 규제 일부 완화 수용

넷째, 그러나 행정수도 건설의 가시화 이전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적극적 반대 입장 필요

다섯째, 충청권 내부지역간 행정수도 유치권 위한 소지역주의 발호 경계

여섯째, 행정수도 건설이 충청권 전체 지역에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플랜 구상 필요

(예, 서울 중심 연계형, 즉 서울 의존형 행정수도 보다는

충청권 자족성을 갖춘 행정수도 건설이 충청권에 바람직함)

#### □ 행정수도 건설 추진 절차와 국민적 합의 형성 방안

- 노무현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행정 수도 추진 절차와 한 국민적 합의 과정에 대해 분명하게 밝힌 바 있음.

#### ■ 후보 시절 노무현 당선자 관련 공약

- 당선 후 1년 이내에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적 합의 도출.

-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설치.
- 위원회 산하에 “신행정수도입지선정분과위원회” 를 두고 2003년 말까지 입지 선정  
작업 총괄

- 대선을 통해 절반의 정당성 확보. 그러나 다시 한번 국민적 합의 필요

-> 행정수도 건설 공약은 이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상당히 뜨겁게  
진행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으므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치적 정당성은 확인받았다고 할 수 있음.

그렇지만 행정수도 건설은 우리나라 국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  
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한번 국민적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함. 그렇지 못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기의 레임덕 기간이나 노무현 대통령 이후 정부에서 지속적 추진  
의 동력이 상실될 우려 있음.

- 우선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대로 대통령 취임 후 즉시 대통령 직속의 추진기구 설치가 필요  
함. 여기서 1년 동안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 작업을 통해  
종합 보고서 작성.
- 이 위원회에서는 단순히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전반  
적 연구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함. 따라서 이 위원회의 명칭도 공약에서 제시된 “신행정  
수도건설추진위원회” 보다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등이 바람직할  
것임.

- 위원회의 역할

- ▶ 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 논리 개발
- ▶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각종 실무 프로그램 개발
  - 1 : 입지, 규모, 개발시기, 개발 방식, 소요 예산 등
- ▶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국민적 합의 도출과 여론 홍보
- ▶ 행정기능 이전 후 현 수도권 기능의 재정비
- ▶ 행정수도 건설 관련 외국 사례 조사

- ▶ 행정수도 건설 이외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여타 정책 수단 개발
- ▶ 행정수도 건설 이후 국토의 미래 청사진 제시

- 특히 향후 1년간 대선 과정에서 이미 제기되었거나 향후 제기될 반대 논리 극복을 위한 연구 필요.

이때

- ▶ 건설 비용 과다론
- ▶ 수도권 공동화와 부동산 폭락에 따른 경제 위기론
- ▶ 국토 방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수도 남행 반대론
- ▶ 용수 부족론

등은 대선 과정에서 한나라당 측에서 제기되었으나 쉽게 제압 가능

그러나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반대 논리인

- ▶ 통일 고려 행정 수도 건설 시기상조론
-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효과 무용론 : 또 다른 일극 집중론
- ▶ 강원, 영남, 호남 소외론
- ▶ 수도권 규제 철폐로 인한 수도권 집중 강화론

등에 대한 설득 논리 개발 필요함.

- 특히 한나라당, 한나라당 집권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및 의회, 조중동 등 보수언론, 서울소재 기득권층이 노무현 정부 흠집내기 차원에서 대대적인 반대 공세를 전개할 가능성이 높음.

#### ◎ 행정수도 건설 지원 세력

- 청와대
- 지방 분권 운동
- 충청권 자치단체 및 주민
- 수도권 과밀화를 거부하는 수도권 시민단체 및 주민

◎ 행정수도 건설 반대 세력

- 야당인 한나라당
- 서울에 근거하고 있는 여론주도 계층 및 파워엘리트 집단
-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 반기를 들고 있는  
조선, 동아, 중앙등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결집될  
가능성 있음.

\* 일본의 경우 수도 천도의 가장 반대 행위자는 동경도임.

○ 일본의 경험을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음

- 일본은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행정수도 논의가 시작되었음.
- 1992년에 국회에서 국회등이전에 관한법을 만든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됨.
- 현재 국회가 이전 논의를 주도하며(국회 등 이전에 관한 특별위원회), 1995년에 이전규모, 방법, 후보지 선정절차 등 기준을 확정하고, 1999년에 이전 지역 후보지를 3군데로 확정하였으나, 현재 최종 후보지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

△ 일본의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 현재 지연되고 있는 표면상의 이유는 동경도 등 반대론이 강화되고, 경제불황에 따른 비용문제도 제기되기 때문임
- 그러나 추진방법에도 중요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①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추진동력의 상실; 수도 이전 결정 후(1992년)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하는데에만 7년이 걸려(1997년) 처음에 지지하였던 국민의 관심과 추진 동력이 떨어짐.
  - ② 후보지 선정에 둘러싼 갈등; 후보지 선정 이전까지는 지방의 관심이 컸으나,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한 이후, 배제된 지역은 무관심해 지고, 선정된 지역간에 지역간 경쟁이 격화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가 줄어들음,
  - ③ 국민적 여론 조성의 실패; 국회 주도로 추진되고, 국민투표 등의 절차가 없으므로 광범한 여론 형성과 국민적 합의가 형성 안됨. 특히 국회는 특히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후보지의 합의 도출에 성공적인 기구가 아님.
  - ④ 총리 주도로 진행되는 국가 개편 논의와 연동하여 추진되지 못함; 국회에만 수도이전 관련 기구가 있고, 행정부내에는 없음. 따라서 행정부의 수상 산하기구인 행정개혁 추진본부,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지방제도 조사회, 국토심의회, 세제 조사회 등이 추진하는 국정 개혁의 과제와 별도로 추진됨.



- 국민적 합의의 가능 방식

1. 국민투표
2. 국회 결의
3. 국민투표와 국회결의 병행
4. 광범위한 여론 조사
5. 대통령 특별 담화
6. 기타

- 아울러 행정 수도 건설의 추진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중앙부처 1-2개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 의 대전청사 이전을 대통령 취임 직후 바로 착수할 것을 제안. (이회창 후보도 주장한 공약이었으므로 한나라당 반대 불가능. 이미 국민적 합의라고 보아도 무방)

□ 행정수도 입지 선정 과정과 기준

- 행정수도의 최종 입지 선정은 부동산 투기 사전 예방, 입지 유치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 예방 차원에서 국민투표를 통한 행정수도 건설의 국민적 공감대 확보 이후 적당한 시기에 최종 확정함.

- 행정 수도의 입지 선정 기준

▶ 물리적 기준 :

수도를 건설할 만한 규모, 즉 인구 50만 장기적으로 100만 정도의 도시가 입지할 만한 넓은 규모의 평탄한 토지 확보 및 용수 확보가 가능한 지역.  
장래 도시의 확장이 가능한 곳.

▶ 정치 경제 사회적 기준 :

-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역.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는 가장 큰 목표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이 기준에서 보면, 천안 아산 등지는 지금도 이미 수도권에 편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수도권에 너무 근접함으로써 배제 필요.

- 지역감정 해소와 국민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

▶ 소요 비용 기준 :

가능한 기존에 투자된 하부구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공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곳

▶ 군사 안보적 기준 :

유사시 대통령 및 주요 요인과 시설의 안전과 경호가 용이한 곳

▶ 기타 : 대규모 토지 확보가 용이한 곳. 부동산 투기 억제가 용이한 곳 등

□ 부연 : 행정수도 건설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수단임.

- 행정수도 건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국정 운영 철학이자 핵심 공약인 국토균형발전과 동북아 중심지 건설, 정경 유착 근절, 사회적 차별 철폐 등의 대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실천 프로그램이라는 점. 즉 grand 국정 구상 그림 중의 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국정 운영 전반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무엇보다도 행정수도 건설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함. 따라서 행정수도 건설 이외의 다른 차원의 국토균형발전 수단들이 적극적으로 병행 개발되어야 함.
- 또한 이른바 <21세기 한반도 대개조론>, <국토 개조론> 등과 같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국토 통일, 동북아 지역경제권의 대두 등과 같은 21세기 시대 조류를 적극 반영한 미래 국토공간의 미래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할 필요 있음. 이때 행정수도가 들어설 충청권 지역 이외의 나머지 각 지역 별로 참신한 프로젝트를 개발, 결합시키면, 전국적인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나아가 이렇게 국토 공간 대개조론, 지역 발전론을 노무현 정부의 핵심 화두로 내세우면서 현재의 망국적 지역감정과 비합리적인 영남-호남 갈등 구도에 대한 해체를 도모해야 함.
  - 한편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가 행정수도 건설 추진보다 선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시정 필요.
- > 건설교통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에서 벌써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이 도모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친 시기상조로써, 자칫 행정수도 논의보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선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기에 적절한 제동이 필요.

# 신정치행정수도건설의 필요성과 기본과제

이 덕 복(토지공사 토지연구소)

## 1. 국토균형발전과 신정치행정수도건설의 필요성

- 수도권과 경부축상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은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과밀지역과 과소지역간 갈등, 계층간 갈등을 유발하여 국민통합 저해
- 산업화의 중심에 있는 수도권과 경부축은 교통문제, 환경문제, 주택문제 등 개발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에 산업화로부터 소외된 지역은 각종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장소경쟁력, 발전잠재력에서 구조적 취약성 내포
- 대외적으로 자본주의경제의 세계화, 대내적으로 지방화의 요구에 따른 世方化시대와 기계문명으로부터 정보문명으로 급속하게 전환되는 문명사적 전환기에서 국가발전은 국토전체의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 국토경쟁력은 이원화된 국토공간을 통합하는 것임.
- 이원화된 국토공간구조를 통합한다는 것은 “남한-북한”으로 단절된 “한반도의 통합”이며, “중앙-지방,” “수도권-비수도권,” “중심축-주변축”으로 분절화, 파편화되어 있는 지역의 통합이며, 산업화의 수혜계층과 산업화의 소외계층간의 사회적 통합을 의미함. 이는 결국 국토균형발전의 과제이며 그 실현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신정치행정수도의 건설임.
- 따라서 신정치행정수도는 현행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단순한 기능이전의 차원을 뛰어 넘는 국토공간 전체의 대수술이며 그 가운데 국토경영의 철학적 정초를 착근하는 것임. 이 같은 국토경영철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으면 안됨.

☞ 수도권 집중도

주요 지표별 수도권집중도

구 분	전 국 (A)	수도권 (B)	집중도(B/A)
면 적(km <sup>2</sup> )	99,800	11,754	11.8
인 구(천인)	47,977	22,216	46.3
사업체수	2,927,330	1,290,717	44.1
제조업체수	297,416	147,598	49.6
대학교	161	66	41.0
공공청사	276	234	84.8

자료 : 국토연구원, 국토균형발전 중장기비전연구, 2001.

구 분		단 위	전 국	수도권	수도권비중(%)
지 역 경 제	지역내 총생산(1996)	십억원	387,843	178,098	45.9
	제조업종사자수(1997)	천 명	2,697.6	1,226.6	45.5
	제조업사업체수(1997)	개 소	92,138	50,727	55.1
	예 금 액(1998)	십억원	770,655	390,612	50.7
	대 출 액(1998)	십억원	515,550	330,228	64.1
	토 지 가 격(1997)	조 원	1,292	704	54.5
	100대 기업체수(1996)	개 소	100	95	95.0
	사무관리직취업자(1995)	천 명	5,892	3,287	55.8
	기업부설연구소수(1998)	개 소	3,877	2,720	70.2
기 타 여 건	공 공 기 관 수(1997)	개 소	282	254	90.1
	대 학 정 원 수(1997)	명	572,165	196,370	34.3
	의료기관병상수(1995)	개	196,232	86,003	43.8
	공연·전시시설수(1996)	개 소	1,816	774	42.6
	면 적(1997)	km <sup>2</sup>	99,268	11,675	11.8

주 : \* 공공기관에는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시험·연구·연수·학교·협의체)과 공공법인(투자기관, 재투자기관, 출연연구기관, 재정지원기관) 포함

\*\* 토지가격에서 비과세토지는 제외

## 2. 신정치행정수도건설을 둘러싼 주요 쟁점 및 과제

### □ 신정치행정수도건설 기본구상과 추진전략

- 현행 수도권 및 경부축 중심으로 고착화된 국토공간구조의 근저를 신정치행정수도건설이라는 수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을 추동하고 또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수 있는가의 타당성 문제
  - 신정치행정수도의 건설이 국토균형발전에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의 당위적, 현실적 타당성
- 신정치행정수도의 입지장소, 규모 등의 모습, 건설시기, 건설방법
  - 신정치행정수도가 충청권이라 하더라도 과밀화된 기존의 경부중심축을 강화할 경우 신정치행정수도건설이 추구하는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문제 또는 정당성문제
  - 경부중심축을 벗어나 새로운 축을 형성하거나 경부축외 다른 발전축을 강화할 경우 황해권을 지향할 것인지, 환동해권을 지향할 것인지의 문제, 또 경부축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할 때 어느 정도 벗어나야 하는가의 문제.
- 신정치행정수도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형성 방법 및 절차
  - 신정치행정수도건설의 필요성 등 그 자체에 대한 국민적 합의형성
  - 신정치행정수도의 입지기능, 장소, 규모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형성
  - 신정치행정수도의 건설시기 및 건설방법 등 추진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형성

### □ 현 수도권의 대책과 재편방향

- 수도기능의 이전이 현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분석
  - 수도기능이전으로 과연 수도권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는 등 복합불황이 초래될 것인가?
  - 수도기능이전으로 현행 수도권의 혼잡이 해소되어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할수 있는가?
  - 위 상반되는 문제에 대해 정치적 수사가 아닌 분석적 담론이 필요.
- 수도기능 이전후 현 수도권의 기능 재배분 및 공간구조 재구성 과제
  - 국제 금융, 보험, 비즈니스 중심의 세계도시화전략과 경제수도 구상

□ 신정치행정수도 입지지역의 기능재배분과 공간구조 재구성

- 신정치행정수도건설이 현 광역중심도시, 지역중심도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신정치행정수도의 건설이 광역중심도시인 대전, 청주, 지역중심도시인 천안, 공주, 논산 등의 도시기능 또는 도시세력권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약화할 것인가?
  - 이전기능의 종류와 범위, 위치 및 규모 등에 따라 기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 신정치행정수도와 광역 및 지역중심도시(대전,청주,천안 등)간 기능연계 또는 기능재배분 과제
  - 신정치행정수도건설이 이 지역 도시들의 발전 뿐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연계

□ 신정치행정수도건설을 뒷받침하는 국토정책기조 및 그에 따른 국토체계개편방향

- “지속가능한 국토균형발전”은 새 천년-새 한국이 지향하는 국토의 바람직한 모습이며, 국토정책의 철학적 정초
  - 신정치행정수도는 새 천년, 새 시대가 요구하는 권력의 지방분권과 기능의 지방분산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국토의 지속가능성 뿐 아니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 신정치행정수도의 기본구상에 따라 국토의 발전축 수정보완 및 기능재배분
  - 신정치행정수도의 기본구상에 따라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투자순위 부분조정
  - 현 수도권 및 신정치행정수도권의 지역에 대한 실현가능한 종합대책 마련

3. 신정치행정수도의 건설효과

- 신정치행정수도의 건설효과는 어느 지역, 누구의 입장에서 파악하는가에 따라 상대적임. 예컨대, 신정치행정수도의 건설로 현행 수도권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하락한다면 그 소유자에게는 부정적이지만 무주택서민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음.
- 수도기능의 배치방법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예컨대 수도기능을 충청권의 지역에 일부 배치할 경우 당해 지역과 충청권에 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일 수 밖에 없음

수도권	충청권	기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증가율 감소</li> <li>· 혼잡해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저감</li> <li>· 규제완화, 탈규제 가능</li> <li>· 주택 및 토지가격 단기 하락, 장기 안정</li> <li>· 세계도시화프로그램 운영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증가율 상승</li> <li>· 주택 및 토지가격상승</li> <li>· 삶의 기회에 대한 접근성 증가</li> <li>· 기존 도시의 경우 상승적 연계효과로 나타날 수 있고, 경쟁적인 관계로 쇠퇴할 수도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기능 분산배치의 경우 충청권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정도의 차이는 있음</li> <li>· 일부기능 분산배치없을 경우 인구감소가능성 있음</li> </ul>

☞ 2002~2020년까지 인구증감추이(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 수도권 : 2,948,917명 증가
- 충청권 : 427,422명 증가
- 기타지역 : 365,697명 감소

☞ 2011년까지 경기도 도로혼잡비용추계(년간 약 2조9천억원)

4. 신정치행정수도과 병행추진해야 할 과제

○ 자치행정 및 자치재정의 역량강화를 통한 진정한 지방화, 지방자치의 실현

- 자치사무의 증대, 지방재정의 자주성·자율성강화
- 장소의 발전뿐 아니라 주민의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정치, 생활정치 실현

○ 현행 수도권에 대한 대책

- 단기적으로 수도기능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수단을 마련하되 신정치행정수도의 건설계획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시행
  - 규제완화나 탈규제 정책수단의 임시방편적인 대책은 오히려 현 수도권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신정치행정수도건설의 효과를 저해
- 장기적으로 세계도시화를 지향하는 국제경쟁력강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충청권에 대한 대책

-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후보지경쟁에 따른 지역간 갈등해소책 마련

○ 수도권-충청권의 지역에 대한 대책

- 상대적 박탈감해소와 지역균형발전시책 마련
- 지역경쟁우위산업의 발굴 및 집중육성
- 신정치행정수도의 위상과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타지역으로 기능분산 유도

# 首都機能移轉의 개념적 범위와 방법 및 절차

김 중 구(중부대 도시계획학과)

## §1.首都機能移轉과 首都移轉의 차이

우선, 行政首都란 용어의 불명확성에 대해서 언급하면, 일반적으로 首都라 함은 「국가의 중앙 정부가 있는 도시」, 혹은 「국가의 두뇌 혹은 심벌로써의 기능이 所在하는 도시」로 정의되어 있다.<sup>1)</sup> 즉, 입법기관인 국회,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사법기관이 소재 하는 곳으로 국가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수도라 한다.

그런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행정수도는 수도의 기능 중, 행정기능만 수행하는 수도를 일컫는지, 아니면 전반적인 수도기능을 통칭하여 불리어 지고 있는지, 용어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도이전이라고 하면 수도의 대표적 세 기능을 모두 이전하는 것이고, 행정기능과 입법기관 등의 일부만 이전한다면 수도기능이전이란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공약에서 발표된 내용과 전문가 및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행정수도이전이란 용어는 수도의 행정기능만 이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수도기능의 일부를 이전하자는 쪽에 기울고 있는데, 그 기능 이전의 범위에 따라 사용용어가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混用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의 이전주체는 수도이전의 기능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기능의 이전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향후 이전계획의 규모설정과도 큰 상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물론, 차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능이전이 행정기능에 국한되어 있다면 행정수도이전이란 용어사용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수도이전이 아닌 **수도기능이전**이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장

따라서 本稿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향후 수도기능이 이전되어 질지 모르지만 이전된 기능으로 새로이 건설될 수도를 신도(新都)라 칭하기로 하고 신도이전이 가지는 국토계획상의 의미와 필요성, 갖추어야 할 조건, 그리고 그 절차 및 방법, 해외의 수도이전 사례에 관하여 논하기로 한다.

1) 우리나라에는 수도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설명이 없다. 지방자치법 제161조와, 서울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서울을 수도로 일컫고 있을 뿐, 적극적인 법률적 강제나 해석을 하지 않고 있다.

다.

## §2 新都건설은 새로운 國土構造 형성의 第1步(의미, 필요성, 조건)

新都건설은 서울이 우리나라의 중심지이고 정치행정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한국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중립적인 新都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토구조로 재편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와 타 지역이 동등한 입장에 서서 경제, 문화 등의 사회전반에 걸쳐 좋은 의미에서의 경쟁을 통해 상호 발전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신도건설이 추진되어야만 한다.

즉, 「수도과 지방」의 구조에서 「지역중심의 시대」로 변모되는 국토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신도가 건설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왜 수도기능을 이전해야만 하는지, 그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향후 건설될 신도가 갖추어야 할 自畫像에 대해서 논하기로 한다.

### ■ 수도권 1극 집중현상의 억제

서울은 권력, 돈, 지식을 독차지한 '특별시'들의 '특별시'가 되었다. 수도권에 국민의 절반이 몰려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없고 서울 공화국만 있는 참으로 기이한 형국이다.

대도시 인구 집중화에 따른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농어촌 공동화가 매우 심각하며, 서울대학교가 교육적 측면에서 그렇듯이, 서울은 그 불균형의 핵심, '악의 축'이다. 서울의 비대화, 수도권의 팽창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토의 균형적 개발, 국민 복지의 균형화는 필수적이며 국가 경영, 안보 차원에서도 현재의 정치, 경제, 문화적 힘의 서울 집중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힘의 역류, 권력의 분산, 국부(國富)의 확산이 필요한 때이다.

### ■ 작은 정부와 지방분권의 확립

현재의 행정기구(행정조직)는 국내외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서 자기변혁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 때문에 정부의 행정기구(행정조직)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지 못하고, 예산과 권한의 강화와 그에 따른 병폐를 보완하기 위해 부분수정만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지방으로의 대폭적인 권한을 위임해서 작은 정부를 구성함과 동시에 사회정세의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작은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부문과 세부행정을 물리적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한데, 이는 신도를 건설하여 수도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가능해

진다.

### ■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수도기능이전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도시를 포함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수도기능이전은 필요하다. 이것은 移轉地인 新都를 풍요롭고 윤택한 도시로 창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 후 서울의 과밀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여유가 생겼을 때 그 여유를 활용해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도시재생을 도모하자는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도시재생의 일환으로써 수도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 지향하는 바는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무미건조한 정치도시로부터의 탈피

新都도 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생활하는 장소이다. 新都가 가지는 중요하고 고도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하여도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생활 여건을 갖춘 거주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1세기 한국의 상징적 도시가 될 신도는 한국인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창조와 맥을 같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제적으로 보아도 우리 문화에 대한 신뢰를 고양함과 동시에 한국의 아이덴티티를 대변할 수 있는 도시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도를 건설함에 있어 도시계획을 비롯한 건축, 공학, 정보통신, 환경뿐만 아니라 철학, 예술, 역사, 사회, 심리 등의 문명전반에 걸친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 ■ 21세기의 창조적 기념비로서의 新都계획

(초장기적인 도시성장과정이 반영된 도시계획)

새로이 계획되는 신도는 21세기 이후 먼 장래에 걸쳐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도시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초장기적인 도시의 성장과정과 장래의 한국의 지역구조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반영된 도시계획이 요구된다. 특히 도시구조의 형성과정을 보면,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적 문맥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파리, 런던, 로마, 빈, 북경 등의 도시가 지금까지도 국제적 도시로써 깊이 인식되어 있는 것은 무엇보다 그들 도시가 국가의 찬란한 역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수도의 이전 및 건설계획은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재인식하여 신도와 그 주변도시들 사이에는 각각의 도시고유의 자연, 역사, 문화, 산업의 특징 등을 최대한 살린 최적의 상호 보완적 관계가 유지되는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 ■ 장래의 수도권 확장을 고려한 도시성장계획이 절실히 요구

우리의 현실에 비춰볼 때, 새 수도의 인구규모를 40만~50만 정도로 희망하지만 결국 주민 1-2백만의 도시로 성장할 것을 지금의 시점에서 미리 예상해야 한다. 3권의 일부 혹은 전부가 이전되고, 정부투자의 공공기관, 교육기관을 비롯하여 도시자생력을 고려한 산업 등이 입지 되어 장기간에 걸친 도시성장을 고려하면 지금 예상하는 이전 규모로부터 한세기 이상에 걸친 초장기적 성장계획이 요구된다.

대전은 대덕 단지 건설 이후 과학 기술의 산실로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함께 해야 할 교육 환경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조차 정치, 행정에 묶여있고 그 중추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대전은 교육 과학 기술의 메카로 충분하며 그렇게 발전해야 한다. 현재 대전 인구가 얼마인가? 왜 대전을 또 하나의 서울과 같은 괴물 도시로 만들어야 하는가? 도시의 "다원화, 전문화"는 그게 아니다.

특히, 천안을 중심으로 반경 50km권 이내로의 수도 이전은 자칫 기존 수도권의 확산에 그칠 공산이 크다. 기반 조성이 되어 있다, 이전 비용이 저렴하다, 공약 사항이다, 풍수가 어떻다, 서울이 가깝다 등은 수도를 이전하는 근본적인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

모든 선입관과 편견, 공약의 부담감을 버리고 지역 이기주의를 배척하고 오직 국가의 백년대계만을 고려한 이전계획이 절실히 요구된다.

## §3. 新都移轉의 절차 및 방법

현재, 정부차원에서 新都이전 추진을 위한 기획단조성 준비작업을 하고있는 단계로 알려져 있지만, 향후 어떠한 절차를 걸쳐 어떤 형식으로 신도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하기로 한다.<sup>2)</sup>

본 내용은 장기간에 걸친 일본의 수도이전계획의 절차를 참고하였다.

우선, 신도이전은 초국가적 프로젝트를 감안하여 총체적인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에서 「신도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 「수도기능이전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장기간에 걸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과 병행하여 정부차원에서 관련 행정기관 및 대통령자문기구로서의 「수도기능이전에 관한 전문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관계공무원, 실무자, 시민 등에 의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일본의 국회에 설치된 「首都機能移轉에 관한 特別委員會」의 答申 참조, 참고문헌3

다음엔. 상기의 법률 및 전문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 입각하여 정부의 관련 부처에 「국회 등의 이전조사회」가 설치되어 이전대상의 범위와 移轉地의 선정기준, 이전의 시기 등이 검토된다. 수도권기능이전 후보지의 선정은 국회 내에 설치되는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중립적인 선정기구를 통하여 전문적이고 精度 높은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국회가 법률에 의하여 이전지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상의 절차와 이 이후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그림-1의 Flow에 요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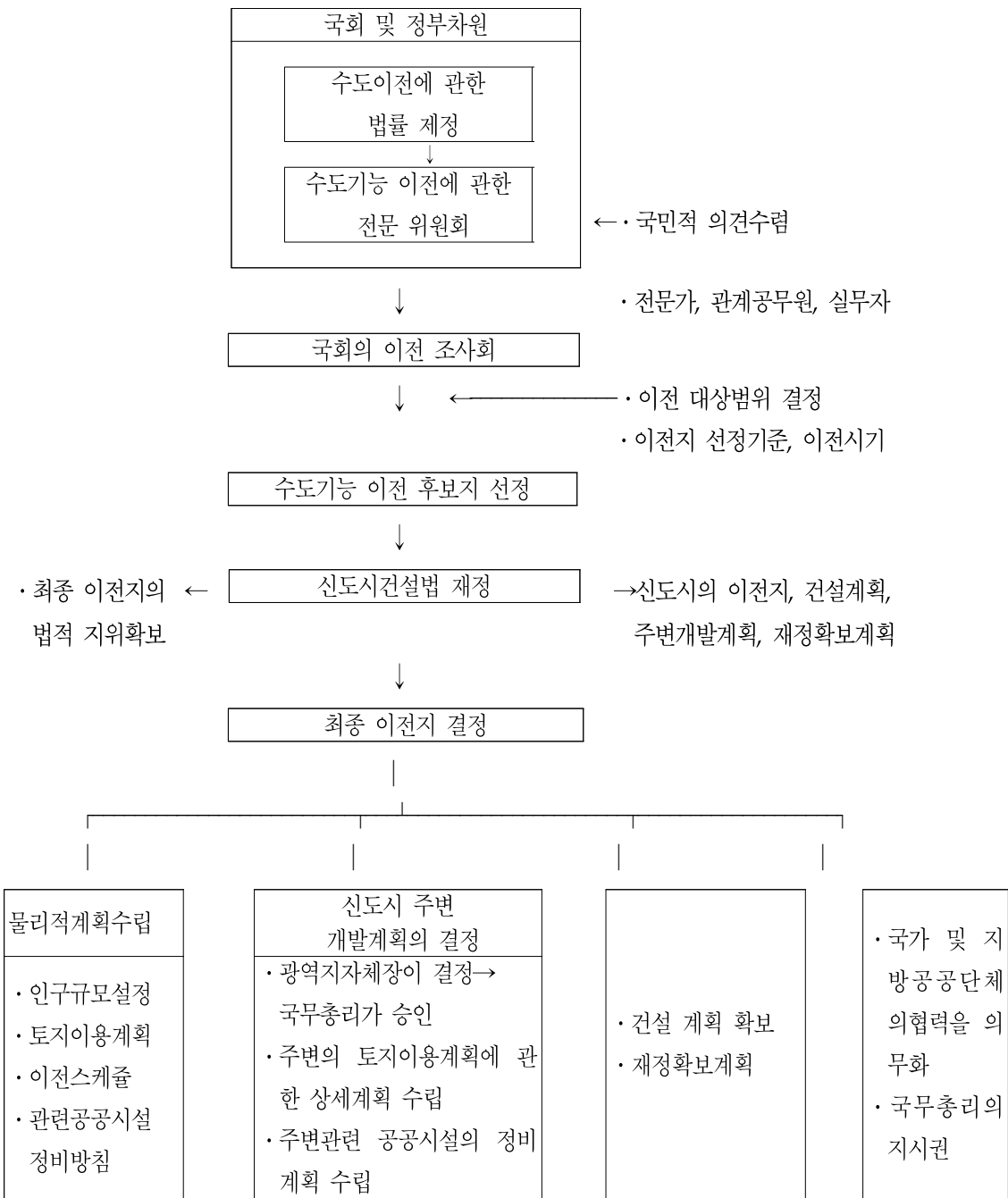


그림 1. 신도이전의 절차 및 방법

## ■ 移轉方法(정부기관대상)

정부기관의 이전은 브라질리아와 같이 정부중핵시설을 먼저 이전하고 건설공사의 진행과정과 병행하여 타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시설을 건설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일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킴으로 피해야 한다. 즉 신도를 건설해 나가면서 부분적으로 일부기관을 선행적으로 이전하고, 동시에 각 종의 국제적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도시환경을 정비해 연착륙해 나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현재 신수도 건설 중인 나이지리아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정부 중핵부의 이전 직전에 국제박람회 등의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은 신도에 대한 국민의 의식향상과 세계적 인지도를 고양하는데 有意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의 기관은 국회와 내각보다 다소 늦게 이전한다든지 혹은 실용성이 낮은 시설의 건설을 나중에 하는 것도 원활한 이전방법 중의 하나가 되리라 본다.

독일, 호주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본격적인 국회의사당 건설은 꽤 차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해외의 수도기능이전 사례

수도기능이전의 해외사례로서 일반적으로 소개되는 곳은 독일, 브라질, 호주,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이고, 현재 수도이전에 관한 국민적 합의와 국회 및 정부차원에서 진행 중인 곳이 일본이다. 이 중 수도이전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주어진 여건이 한국과 유사한 곳이 일본이다. 이외의 국가는 수도이전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그 취지를 상당부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국가들의 수도이전에 관한 배경과 목적, 규모, 결정형식, 등의 항목에 착안하여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1이다.

국 명	호주	브라질	독일	일본(추진중)
이전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방제국가성립에 맞추어 국가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사업</li> <li>각주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 기존도시가 아닌 전혀새로운 도시로서 건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개발지인 브라질 내륙부의 발전 지향</li> <li>국토의 균형적 발전</li> <li>경제성장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조약에서 확인</li> <li>통일에 의한 새로운 역사 시작의 상징</li> <li>구동독지역의 개발 촉진</li> <li>연방정부소유의 부동산이 베를린에 다수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1극 집중의 분산책</li> <li>지가상승억제책</li> <li>지방분권</li> </ul>
이전 규모	인구31만(1999) 면적2,359km <sup>2</sup>	인구204만(2000) 면적5,783km <sup>2</sup>	인구339만(1999) 면적889km <sup>2</sup>	인구50만 면적8500ha
이전의 결정형식	헌법에 수도의 입지요건명시 (1900년)	헌법(1946)	연방의회결의 (1949)	국회결의(1990)
이 전 지	멜버른→켄버라	리오데자네이로→브라질리아	본→베를린	3개후보지 결정상태
이전된 기관	3권의 전 기관	3권의 전 기관	연방의회,참의회 대통령부 연방수상부를 포함한 10개 연방청	

표-1 해외의 수도이전 사례



## 참 고 문 헌

1. 國土交通省, 「第3回國會等移轉審議公聽會(東京)の概要」, 1999
2. 新首都構想研究會, 「國際シンポジウム21世紀新首都の展望」, 2000
3. 國會等移轉審議會, 「國會等移轉審議會答申」, 1999
4. <http://www.shu-kokkaiiten.go.jp/index2.html>
5. <http://search.yahoo.co.jp/bin/search/>
6. <http://shinto.jpc-sed.or.jp/index.html>
7. <http://www.geocities.co.jp/HeartLand-Gaien/>
8. <http://www.mlit.go.jp/kokudokeikaku/daishu/>
9. <http://www.chijihonbu.metro.tokyo.jp/>
10. <http://www.pref.gifu.jp/>
11. <http://www.apu.ac.jp/research/newcap/international.html>

#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 ■조직개요/현황

### 1. 사무실 소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03호

전화 042)256-8032 253-8176 전송 042)252-6976 이메일 ngotj@korea.com

### 2. 임직원 현황

- 상임공동대표 김주일/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이명남/충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목사  
조연상/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목원대 교수
- 공동운영위원장 안성호/대전대 지역협력연구원장, 대전대 교수 [상임]  
이상선/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청양포럼 대표  
이숙자/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주부교실 사무국장  
표정열/TJB대전방송 보도국장
- 정책위원장 육동일/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회장, 충남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 기획위원장 박 경/지방분권지식인선언대전충남추진위 대표, 목원대 교수
- 대외협력위원장 이상현/MBC대전문화방송 노조위원장
- 집행위원장 김제선/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고문 김원웅/국회의원 박병석/국회의원 이양희/국회의원 심대평/충청남도지사  
염홍철/대전광역시장 이복구/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은규/대전광역시의회의 의장  
박강수/배재대학교 총장 신극범/대전대학교 총장 신운표/한남대학교 총장  
이광진/충남대학교 총장 강용식/대전시개발위원회 회장 유근중/목원대학교 총장
- 자문위원 최성호/충청하나은행 대표 김시환/청양군수 나소열/서천군수 진태구/태안군수  
김행기/금산군수 김무환/부여군수 김성기/중구청장 이병령/유성구청장  
임영호/동구청장 가기산/서구청장 오희중/대덕구청장 강희복/아산시장  
김낙성/당진군수 박수복/대덕구의회의장 임성규/논산시장 조규선/서산시장
- 지도위원 김학원/서구원 오재진/민주노동당 대덕구지구당 위원장 장현자/서구의원  
윤성환/대덕구의원 김여탁/대덕구의원 박명철/대덕구의원 최충규/대덕구의원
- 운영위원 고성길/공주녹색연합 사무국장 금영필/대전시개발위원회 사무국장  
김경희/대전여민회 사무국장 김광식/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병빈/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상호/기독교세진회대전지부 사무총장  
김선진/지방분권지식인선언추진위 대표, 충남대 교수 김양현/천안YWCA 총무  
김억수/서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영수/천안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 사무국장

김용분/전 구의원, 대전충남여성환경포럼 집행위원 김재근/대전일보 경제과학부장  
 김종남/대전충남여성환경포럼 사무국장 김종선/바르게살기대전광역시협의회 사무처장  
 김지훈/아산시민회 사무국장 김태용/천안KYC 사무국장 김학용/중도일보 편집부장  
 노중호/유성민주자치연합 회장 류진석/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총무, 충남대  
 박정현/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종범/민주노동대전충남본부 사무처장  
 박혜경/대전매일 문화부장 성기원/예산시민사회연대회의(준)  
 심규상/충남지역신문협회 취재부장 안영섭/대전서구자활후견기관 관장  
 우경연/한국복지재단대전지부장 우희창/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국장  
 유진수/천안YWCA 총무 이광진/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석봉/대덕밸리-대덕넷 대표 이윤희/공주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이인세/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사무국장 이정일/태안참여자치연대 사무국장  
 이철호/대전성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충재/대전YMCA 사무총장  
 이평주/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이희출/서산YMCA 총무 이희경/조치원YWCA 총무  
 임현균/대전대 지역협력연구원 장현자/서구의회 의원 정형영/홍성YMCA 총무  
 조상연/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주원삼/대전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전성환/아산YMCA 총무 정선원/공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정 춘/충청하나은행 본부장 정 훈/논산YMCA 총무  
 차수철/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최양순/천안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최영준/천안시민포럼 사무국장 최종길/충남지역신문협회 사무국장  
 최준호/중앙일보 차장 최진혁/충남대 자치행정과 교수 한진걸/대전홍사단 사무국장  
 황선만/보령시민참여연대 사무국장  
 박상우/대전참여자치연대 기획국장

-사무국장

## **■ 활동일지**

### 1. 창립 경과보고

2000.10.5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행동 출범
2000.10.27~28	영호남 4개 지역연구단체, 지방분권을 위한 지식인선언 추진 검토
2001.3.22	지방자치현장 선포
2001.7.14~15	지방분권 선언 내용 점검 및 대전충남북 등 지역 추가 결합
2001.8.1~31	각 지역별 지식인 지방분권 선언 서명작업 전개
2001.9.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지역지식인 선언 : 총 2,757명 선언(충청지역 163명)
2001.10	대전충남 지식인 분권선언 이후 후속모임 개최
2001.11.24~25	지방분권 지식인선언 지역추진위원회 공동 전국워크숍
2002.1.14	지방분권의회제 워크숍

2002.2.1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 준비소위원회 제1차 회의
2002.4.13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창립
2002.6.7	지방분권운동 포항본부 창립
2002.8.6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 준비소위원회 제2차 회의
2002.9.15	지방분권운동 안동본부 창립
2002.9.17~18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 준비소위원회 제3차 회의 및 춘천선언
2002.10.12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2002.10.26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2002.10.30	지방분권운동 부산본부 창립
2002.11.5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 창립
2002.11.5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본부 창립
2002.11.6	지방분권운동 강원본부 창립
2002.11.7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조직 창립

## 2. 대전충남연대 활동일지

2002.9.24	지방분권운동 대전지역 조직 결성 간담회
2002.10.4	지방분권대전충남연대 준비소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2002.10.11	지방분권대전충남연대 준비소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2002.10.18	지방분권대전충남연대 준비소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2002.10.30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2002.11.5	지역균형발전을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창립식 및 창립기념 토론회 개최
2002.11.11	충남 심대평 도지사 및 각계 대표 지방분권 촉구 기자회견
2002.11.16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2002.12.4	지방분권 촉구 현수막 달기운동 시작
2002.12.5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대전충남지역 기업인 57인 선언(상공회의소 17대 의원 일동)
2002.12.6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대전충남지역 시민운동가 100인 선언
2002.12.6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대국민협약식 체결(08:00, 대전 아드리아호텔)
2002.12.8	민주당 노무현 후보 대국민협약식 체결(09:00, 대구 그랜드호텔)
2002.12.10	대전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지방분권 지지 선언
2002.12.10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운영위원장단 조찬회의
2002.12.11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대국민협약식 체결(09:20, 제주도의회 프레스룸)
2002.12.11	2002대선 지방분권 정책토론회 개최 및 CMB중계방송
2002.12.11	지방분권과 정책선거를 촉구하는 여성계 175인 선언
2002.12.13	지방분권 쟁취 및 투표참여 호소를 위한 전국 동시캠페인 전개
2002.12.16	행정수도이전을 둘러싼 공방에 지방분권국민운동 입장 발표
2002.12.19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논평 발표
2002.12.23	대전충남기자협회 지방분권 선언문 발표, 지방언론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02.12.30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제2차 운영위원회 및 송년회 개최
12.31~2003.2	충남지역신문협회 지방분권 2003년 지방분권 집중기획시리즈 연재
2003. 1. 8	지방분권운동 충청권 연대(대전,충남,충북) 연석회의 개최
2003. 1. 8~9	지방분권국민운동 제2차 전국 운영협의회 및 2003년도 워크샵(대전 홍인호텔) 개최
2003. 1. 9	한국지역사회학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개최
2003. 1.13~	대전매일 지방분권 집중기획시리즈 10회 연재
2003. 1.15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추진 방안 세미나 후원(도청 대회의실)
2003. 1.16	대전경실련, 행정수도이전 관련 내부토론회 개최(목원대)
2003. 1.17	행정수도이전을 둘러싼 대전·충남·충북 지방분권연대 공동입장 발표
2003. 1.17	지역MBC 지방분권캠페인 전국 동시중계,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협력
2003. 1.20	대전매일 지방분권 좌담회(심대평, 조연상, 김주일, 박경) 개최 협력
2003. 1.21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정책협의회 개최
2003. 1.21	행정수도이전 효율적 추진을 위한 내부세미나, 3차 운영위 개최

### 3. 분담금 납부현황(생략)

## ■회의결과

### 2차 운영위원회 및 송년회 회의결과

- ☐ 회의일시 : 2002. 12. 30(월) 저녁 6시
- ☐ 회의장소 : 진부령황태골
- ☐ 참 석 자 : 조연상 안성호 이상선 박 경 이상현 김제선 김선건 노중호 이기홍 안영섭  
우희창 임현균 장현자 최진혁 박상우 배석/ 김경환(대전매일 기자)

#### ☐ 안전심의 결과

#### 1. 대선결과 분석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향후방안 논의 결과

- 행정수도이전 등 분권정책 이슈화, 후보들의 지방분권 대국민협약 체결 등 지방분권연대의 대선 성과에 대하여 간략한 평가의 시간을 갖음.
-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의 입장을 공유함.
  - 1)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추진과정에 지역인사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 2) 3개 충청권이 별개로 가서는 안되며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공동추진기획단을 구성해야 한다.
  - 3) 국민적 지지와 합의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4)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하여 내부토론 형식의 세미나를 조속히 개최한다.
  - 4) 행정수도이전 문제로 지자체 상호간 과열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공동 노력한다.
  - 5) 이를 위해 우선 대전충남충북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 6) 상기 성명은 박경 교수가 초안 작성, 조연상, 안성호, 김제선, 박상우가 함께 준비토록 한다.

## 2. 조직운영방안 논의 결과

- 창립 당시 합의한 대로 2월 새정부 출범까지 한시적 기구로서의 틀은 계속 유지하되 범충청권 대책 위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 필요에 따라 지방분권연대 안에 행정수도이전 특별위원회를 두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2월 이후에 재논의하기로 하고, 지방분권연대의 참여 폭을 개방하여 유사 위원회의 결성을 미연에 방지토록 한다.

## 3. 충남지역신문협회(충남지역 15개 신문) 지방분권 2003년 연중기획시리즈 공동기획의 건

- 충남지역 15개 신문의 협의체인 충남지역신문협회에서 제안한 2003년 지방분권 년중 기획의 건에 대하여 공동 참여를 승인하고, 향후 의견개진 및 매회 칼럼 원고 청탁시 적극적으로 참여기로 하다.
- 1, 2월 집중기획 연재를 시작하고, 이후 새정부의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 및 정치권의 논의 과정과 시민단체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월 1회 정도 기획기사를 준비한다. 협회에서는 매주 캠페인 광고 등을 게재토록 한다.

## 4. 기타안건

### 1) 조연상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상임공동운영위원장 대선시기 언론피해에 대한 처리의 건

- MBC 또는 KBS 뉴스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교수선언에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지방분권 대국민협약식을 체결하던 장면을 여과없이 방영함으로써 언론피해를 당한 건에 대하여 지방분권연대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한다.
- 정정보도 및 해명요구, 사장단·보도국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기로 한다.
- 적절한 해명이 없을시, 민언련의 언론보도피해구제센터의 지원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

### 2) KBS충청페트를 행정수도이전 관련 출연자 확정 건(1/2 또는 1/3)

- KBS의 섭외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자가 참가하기로 하다.

### 3) 2003년 1월 8일~9일, 1박2일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 운영협의회 개최

- 2003. 1. 8 ~1. 9 대전 홍인호텔(8일 17시 개회), (대표 및 운영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함)

### 4) 대전경실련 행정수도이전 내부세미나 개최

- 2003. 1. 16. 3시 목원대 이공관2층 세미나실, (관심있는 위원은 참여하는 것으로 함)

### 5) 차기 운영위원회 일정

- 2003. 1. 20~26 주간에 개최하기로 하다.(22~23안성호 불가, 24~25이상선 불가)

### 6) 분담금 납부의 건

- 분담금을 미납한 단체/개인에게 분담금 납부를 독려기로 함.(최대한 자발적으로 납부 요청)
- 납부금 : 운영위원 10만원, 대표 50만원, 고문·자문위원 대표에 준하여, 지도위원은 10만원 이상

## 지방분권국민운동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2003년 1월 8일 20시 - 22시 30분

• 장소: 대전 홍인호텔 홍인홀

• 참석: 김중석(강원본부 공동대표), 한동환(강원본부 집행위원장), 김영래(경기본부 상임공동대표),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박완기(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 나간채(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이민원(광주전남본부 상임공동집행위원장, 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 김형기(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민영창(대구경북본부 집행위원장, 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 이창용(대구경북본부 사무처장, 국민운동 사무국장), 안성호(대전충남본부 상임공동운영위원장), 김제선(대전충남본부 집행위원장, 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 박상우(대전충남본부 사무국장), 황한식(부산본부 공동대표), 박재울(부산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 김의수(전북본부 상임대표), 최두현(전북본부 사무처장), 이종민(전북본부 집행위원장), 남기현(충북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이두영(충북본부 사무처장) 이상 20명

• 토의안건:

- 2003년 사업계획 확정 건
- 의사결정방식 확정 건
- 정책위원회 구성 건
- 집행체계 및 사무국 안정화방안 확정 건

• 안건별 결정사항:

- 2003년 사업계획 확정 건

• 정권인수기간의 활동: 국민협약 이행에 관한 당선자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하고, 인수위 관련분과와의 대화채널을 조속히 개설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수위에 국민협약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조속히 발송하기로 하고, 대표자회의 의장, 공동대표, 공동집행위원장, 사무국장이 협의하여 추진한다.

• 특별법안 마련: 한국지역사회학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며, 운영협의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 전국연대기구 조직: 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전국적인 연대기구가 필요하며, 연대기구는 정책협의체, 사안별 협의체 방식으로 조직한다. 자치단체와의 정책협의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내에 '지방분권 추진팀' 구성 요청을 검토하기로 한다.

• 위의 사항을 포함한 2003년 사업계획을 공동집행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작성하게 한다. 공동집행위원장은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회원조직에 회람시키기로 한다.

- 의사결정방식 확정 건

• 2월 운영협의회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 정책위원회 구성 건

• 이재은 경기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한다.

• 정책위원회는 분야와 지역과 부문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공동대표와 협의하여 조속히 구성하기로 한다.

- 윤경호(강릉대 교수, 지역개발학), 김중석(강원도민일보 상무이사, 언론), 홍덕률(대구대 교수, 사회학), 박세정(계명대 교수, 행정학), 강성철(부산대 교수, 행정학), 박명흠(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정(전북대 교수, 사회학), 소순열(전북대 교수, 농업경제학)를 정책위원으로 선임한다.

- 주요사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집행체계 및 사무국 안정화방안 확정 건

- 공동대표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적절한 역할분담을 도모하기로 한다.
- 운영협의회의 정례화가 필요하며, 격월 1회 첫째주 금요일로 하며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기로 한다. 다음 회의는 2월 첫째주 금요일에 개최한다.
- 공동집행위원장, 사무국장은 운영협의회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수시로하기로 한다.
- 사무국 간사(상근, 사무차장급)를 두기로 한다.
- 각 지역·부문조직은 회비로 월10만원을 내기로 한다.
- 공동대표들이 재정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조속한 시일내에 가지기로 한다.

## 지방분권국민운동 2003년도 워크숍 회의결과

- 일시: 2003년 1월 8일 오후5시

- 장소: 대전 홍인호텔 홍인홀

- 일정 1월 8일

17시 - 19시 대선시기 지방분권운동 평가

19시 - 20시 식사 및 휴식

20시 - 22시 30분 운영협의회 제2차 회의

- 2003년 운동방향과 사업계획 논의
- 2003년 사업계획 확정
- 의사결정방식 확정
- 정책위원회 구성
- 집행체계 및 사무국 안정화방안 확정

- 참석: 김중석(강원본부 공동대표), 한동환(강원본부 집행위원장), 김영래(경기본부 상임공동대표),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박완기(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 나간채(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이민원(광주전남본부 상임공동집행위원장, 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 김형기(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민영창(대구경북본부 집행위원장, 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 이창용(대구경북본부 사무처장, 국민운동 사무국장), 손중열(안동본부 사무국장), 윤병진(안동본부 집행위원), 안성호(대전충남본부 상임공동운영위원장), 이상선(대전충남본부 공동운영위원장), 김제선(대전충남본부 집행위원장, 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 박상우(대전충남본부 사무국장), 황한식(부산본부 공동대표), 박재율(부산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 김의수(전북본부 상임대표), 최두현(전북본부 사무처장), 이종민(전북본부 집행위원장), 노병관(전북본부 집행위원), 남기현(충북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이두영(충북본부 사무처장), 이병관(충북본부 간사) 이상 25명



● 워크숍 토의내용

1) 대선시기 분권운동 평가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의 지방분권운동조직을 창립한 것이 중요한 성과였다.

-3대 입법의 주요내용을 확정 못했고, 10대 의제의 경우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으나 이 문제에 대한 전국차원의 검토와 토론부족으로 통일적 대응을 못했다.

-토론회, 전국릴레이는 후보자와 방송사의 이해관계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으며, 대국민협약은 큰 성과를 내었으나 운동이 협약중심으로 되면서 지역대중들과 함께하는 분권운동의 상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문화방송 릴레이방송 무산 건은 지방문화방송사협의회회장인 춘천문화방송사장에게 국민운동차원에서 강력항의. 국민운동본부 항의성명발표로 공식대응 했음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함 (김중석 강원본부 공동대표, 김형기 대표자회의 의장)

-지지서명은 부산에서 일부 시도되었을 뿐 전국적 차원은 미흡했다.

2) 2003년도 사업계획

-인터넷 분권운동의 일환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주요사이트(이슈투데이, 오마이뉴스 등)에 분권관련 칼럼을 적극적으로 게재하자.

-광역자치단체에 '지방분권추진팀' 구성을 제안하자.

-중앙방송사에 주요토론(KBS 심야토론, MBC 100분토론)의 주제를 지방분권으로 할 것을 제안하자.

-인수위와 당선자 간담회를 협의할 때, 간담회 추진형식(인수위에서 간담회를 제안하는 형식과 인수위에 간담회를 적극 요청하는 형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당선자 간담회에서 지속적인 분권추진기구 설치 약속을 재다짐 받도록 하자.

-공무원교육연수 등에 강사 파견을 검토하자.

-서울에서 전국이슈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자. "지방분권,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고 한국언론재단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주민소환제 등의 주민참여방안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으며 분권운동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각 지역별로 자치단체와 공동주최 등의 형식으로 지방분권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전국적인 광범위한 연대기구가 필요하며, 연대기구는 정책협의체, 사안별 협의체 방식으로 조직하자.

-지방분권운동의 내용을 잘 드러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슬로건을 개발하자.

-전국민적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자.

-지방분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팸플릿을 조속히 만들자.

-지방분권국민운동 내에 분권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하자.

-분권운동의 강약과 템포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며, 9월 정기국회시기에 운동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올 상반기에는 지역조직 정비 및 기반 구축과 특별법안 등의 마련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국회 입

법제정운동에 집중하자.

-당선자와의 간담회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자. 관련분과와의 창구를 개설하여 관련협의를 해나가자.

## 한국지역사회학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2003년 1월 9일 낮 12시

• 장소: 대전시 유성구 흥인호텔 흥인홀

• 참석: 김형기(경북대 교수), 이민원(광주대 교수), 이재은(경기대 교수), 김중석(강원도민일보 상무), 안성호(대전대 교수), 박 경(목원대 교수), 김의수(전북대 교수), 이창용(대구사회연구소 사무국장)

• 회의결과

-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지방대육성특별법 등 3대 입법과 10대 의제의 구체화 및 해설서 작성을 위한 연구를 한다.

-연구조직체계와 연구팀별 책임자, 팀별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괄팀: 이민원 광주대 교수; 의제 포맷(의제당 A4 5쪽 정도 분량, 배경, 현황, 대안 등의 포맷), 목차 작성

• 지방분권팀: 이재은 경기대 교수; 지방분권특별법안과 관련의제 정리

※관련의제: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 및 지방교부세 인상,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정치 자율성 확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교육자치 개선; 주민투표법 등 주민참여제도 도입;

• 지역균형발전팀: 박 경 목원대 교수;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과 관련의제 정리

※관련의제: 중앙행정부서 및 행정수도의 지방이전, 지역금융산업 육성 및 지역발전특별기금 조성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에는 행정수도 관련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 지역혁신팀: 임경순 포항공대 교수(언론분야: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상무이사, 교육·대학분야: 김윤상 경북대 교수, 문화분야: 이정덕 전북대 교수, 과학기술분야: 임경순 포항공대 교수)

※관련의제: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및 인재지역할당제 도입; 지역과학 진흥과 기술혁신 촉진; 지역 언론 육성, 지역문화와 정보 활성화

※지방대학육성특별법에 담을 내용만을 검토하고, 지방분권국민운동 정책위원회에서 특별법 기준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연구일정 • 3월 말까지 10대 의제 및 해설서 작성 완료

• 4월 말까지 특별법안 작성 완료

• 5월 초 특별법안 공청회 개최

• 5월 말 특별법 최종안 확정

-연구팀장회의를 정례적으로 가지기로 하고, 2월 중순에 연구팀장회의를 가진다.

## 1.2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 지방분권 개혁요구안 (수정前 자료)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노무현당선자의 선거공약, 10대국정과제와 지방분권국민운동 10대의제 비교표

지방분권운동 10대 의제	국정과제 10대과제	대통령 선거공약
1. 중앙행정부서, 행정수도의 지방이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 지방분권화, 패적인 수도권 -> 신행정수도 건설 -> 지역전략산업육성 지방경제활성화 -> 지방대학의 집중육성	5.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시대 5-1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 해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청와대 와 국회, 중앙행정기관을 이전
2. 기관위임사무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5-2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새로운 중 합발전계획을 세워 금융·최첨단 미래산업· 물류 등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개발
3.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 지방교부세 인상		5-3 지역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대통령자문기 구인 「국가균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4.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인재지역할당제 도입		5-4 「지방분권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 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세의 지방 이양과 교 부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의 재정 기반을 확 충
5.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정치 자율성 확보		5-5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를 도입하여 실 질적인 주민 자치를 실현
6.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 개선		5-6 공공부문에서의 '인재지방할당제'를 도입 해 지방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
7. 지역금융산업 육성 지역발전특별기금 조성		5-7 지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산업 집적지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8. 주민투표법등 주민참여제도도 입 (주민참정제도의 도입 확충)		5-8 「지방대학지원법」을 제정하고, R&D투 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지방대학과 지방중 소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향상
9. 지역과학 진흥 기술혁신 촉진		
10. 지역언론 육성 지역문화 정보 활성화		

## 1.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에 관하여

### 1)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구성

- ◇ 지방분권개혁의 내용을 확정할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
- ◇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하되 4년 한시적 위원회로 할 것.
- ◇ 위원회의 위원은 분권적 사고를 갖는 인사로서 과반수는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거주하는 인사로 임명할 것.
- ◇ 행정사무, 재정, 인원을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특별법을 2004년 말까지 제정할 것.
- ◇ 지방분권특별법에는 행정분권과 지방분권의 구체적 실천방법을 포함시키고 지방분권을 점검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

### 2) 지방분권의 추진방향

#### 가. 행정분권에 관하여

##### ◎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에 관하여

- ◇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사무의 성격에 따라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구분한다.
- ◇ 법정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을 폐지한다.

##### ◎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에 관하여

- ◇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유사·중복기능이 많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 ◇ 사무의 이양과 함께 재원과 인력도 동시에 일괄 재배분해야 한다.

#### 나. 재정분권에 관하여

##### ◎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관하여

- ◇ 행정사무의 이양에 따른 재원배분은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확충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 > 주민과 단체장·지방의원의 관계를 참여와 자기책임원칙에 충실하도록 설정하려면 이전재원이 아니라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 ◇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0:20에서 2004년까지 60:40으로 인상한다.
  - > 이전재원 40%의 절반인 20%를 자주재원으로 전환하여 이양해야 한다.
  - > 지방세의 확충방법은 기존 세제의 내실화와 국세세원의 지방이양이 있으나
  - > 재산과세 중심의 기존 지방세제를 통한 재원확충은 한계가 있다.
- ◇ 국세 세원의 지방이양은 세수탄력성이 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
  - > 국세 세목 중 지역간 세원분포가 상대적으로 공평한 세목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므로
  -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공유를 통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수 있다.
- ◇ 지방소득세는 국세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로 하며 기초세율 4%의 비례소득세로 한다.

- > 현재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주민세 소득할은 대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므로
  - > 새로 도입하는 지방소득세는 국세 소득세의 최저세율 9% 중 4%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상대적으로 지역간 불균등성을 완화할 수 있다.
  -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세원을 공유하여 3%의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
  - ◇ 지방환경세를 도입하여 황폐해지는 지역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 ◇ 특정지역의 특수세원에 대한 법정외 보통세와 목적세의 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거주자 소유와 비거주자 소유를 구분하여 비거주자 소유부분을 광역세로 한다.
-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효율화에 관하여
- ◇ 지방세를 이양해도 영세지방단체는 재정력의 신장이 제한적이므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내국세의 15%에서 20%로 인상하여 조정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 >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를 이양하면 내국세의 몫이 감소하므로 법정교부율을 인상하고
    - >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금제도를 도입하고
    - >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간소화하고 기준설정과 배분과정에 지방단체와 협의절차를 설정하여야 한다.
  - ◇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에 대하여 수평적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
  - ◇ 지방양여금을 지방교부세로 통합하여 일반보조금화해야 한다.
  - ◇ 국고보조금은 대폭 축소하고 포괄보조금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 3) 지방자치의 내실화에 관하여

#### 가.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하여

- ◇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실시한다.
- ◇ 지방경찰의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광역단체장에게 부여한다.

#### 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에 관하여

- ◇ 초중등교육을 전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일반지방자치와 통합한다.
  - >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은 통제적 관치교육에 서 비롯되므로 탈통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 > 교육자치는 중앙정부의 위임행정에 불과하므로 초중등교육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 > 자율과 자기책임원칙에 의한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 주민참여에 의한 책임과 자기부담을 위해서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는 통합해야 한다.
- ◇ 교육의 질과 연계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 > 현행 교육재정은 부담과 교육의 질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수 없는 이원구조이다.
  - > 교육재정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육행정과 재정권이 통합되어야 한다.
  - > 교육재정의 재원은 중앙의 이전재원이 아니라 지방의 자주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 국세 교육세를 대폭 지방교육세로 이전한다.

-> 교육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부동산과표현실화를 통해 부동산보유과세를 강화한다.

#### 다. 주민참정제도의 확충에 관하여

◇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일탈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투표제도와 주민소환제를 도입한다

-> 주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안전에 대해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하되 그 조건을 완화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일탈된 행동에 대해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여 견제효과를 유도한다.

◇ 주민감사청구제, 주민발의제 등의 요건 대폭 완화하여 주민의 참여를 쉽게 한다.

◇ 주민에 의한 행정정보공유제를 도입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통로를 마련한다.

#### 라. 지방정치의 자율성 확보에 관하여

◇ 집권화된 정치구조에 의해 지배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한다.

◇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의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 2. 지역혁신을 위한 분야별 개혁에 관하여

#### 1) 지방대학육성을 위하여

◇ 지방대학육성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을 지역산업과 연계시켜 지역별, 권역별, 영역별 특성화시키며, 첨단 과학기술 연구기관을 포함시켜 특성화된 연구산업 클러스트로 육성한다.

◇ 지방대학특성화는 현재처럼 중추적 기능은 수도권에서 담당하고 부수적 기능만을 지방대학이 담당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되며 지방대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해야 함.

#### 2) 인재지방활당제의 도입에 관하여

◇ 중앙 부처의 지방 분산과 고위직 공무원의 지역 할당

◇ 중앙 부처의 각종 위원회에 지방거주 인사를 1/3 이상 참여시킨다.

◇ 대학 입시에서도 인재지역활당제를 적용하며 지역근무인력의 지방대학출신자 채용을 우선 고려한다.

◇ 각종 국가인력채용에 있어 인재 지역활당제도를 도입한다.

#### 3) 지역과학진흥과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 ◇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 선도기술 육성을 추진할 때 지방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
  - > R&D 예산을 총예산 대비 현행 4.7%에서 7%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증가분의 2/3를 지방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배분한다.
  - >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비 및 연구인력 비율을 현재의 45% 수준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인상한다.
  - > 농어촌 정보 격차 해소는 단순한 불균형 해소 차원이 아니라 지방을 IT 산업의 핵심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 지방핵심도시에 첨단 과학기술 연구소를 신설하여 지방 대학도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한다.
  - > 정부 출연연구소의 지방 분소 설치에 나후된 과학기술의 지방 이전만을 촉진할 뿐이다.
  - > 토착적인 과학기술과 첨단 과학기술을 접합시키는 첨단 연구를 지방에 이식시켜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 >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 기술 혁신 추진 체계 구축한다.
- ◇ 최고 통치자의 과학기술 관련 부문에 대한 인식과 지속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 > 과학기술 관련 정부 부처의 영향력이 타 부처에 비해 미약하여 생기는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
  - >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배정함에 있어 지방과학기술 진흥 사업을 포함시킨다.
  - > 점진적으로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관련 행정사무와 그 인력 및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 > 지방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사업 선정시 지방 차별 평가 지표(예:지리적 근접성)를 철폐하여야 한다.

#### 4) 지방언론 육성을 위하여

- ◎ 지방신문의 활성화를 위하여
- ◇ 지방신문 정상화 및 건전육성을 위한 한시적 특별지원법을 제정하라.
  - > 지방언론건전육성지원법을 제정하고 지방언론산업발전위원회와 지방신문정화기금을 설치한다.
  - > 지방신문 건전화를 위한 편집권의 독립장치, 독자위원회의 설치
  - > 부실 무능력 신문사의 자율정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경영투명성, ABC 등 경영자료 공개
  - >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의 광고를 지방신문에도 균형 배정하도록 한다.
- ◇ 소수 과점 전국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히 처벌하고 독과점규제를 조기 도입 실시한다.
  - > 신문협회 자율규제방식을 공정거래위 주관-신문고시 강화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 > 전국지 상위 3사의 신문시장 점유율 75%를 독과점규제기준에 의거 규제해야 한다.
  -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시정한다.
- ◇ 지방신문 육성정책의 수립과 이행
  - > 출판인쇄문화 진흥차원의 지방신문산업 지원책 강구
  - > 한국실정에 맞는 지방신문 육성방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프로젝트 수행
  - > 한국언론재단·언론정책위원회 등에 지방신문사 출신, 지방언론학자를 50% 이상 참여시킬 것

◎ 지방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 ◇ 디지털무한경쟁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지방방송의 경쟁력 향상 정책을 수립한다.
- ◇ 지역방송의 독자성을 위해 지역방송위원회를 독립 구성하거나 방송위원회에 지역방송계 인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 지역방송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조성된 기금의 지역배분을 확대한다.
- ◇ 위성방송 동시 재송신-지역방송 경쟁력 확보시까지 규제
  - > 지역방송의 합의를 전제로 충분한 준비와 공감대 형성된 뒤 검토한다.
  - > 이시(異時)재송신 또는 재편집 재송신 형태로 전환을 추진한다.
- ◇ 공약사항인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에 지역방송계 인사 및 분권지향적 언론학자를 50%이상 참여토록 한다.
- ◇ 지역방송 로컬리티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강화
  - > 지역방송의 경영 및 인사독립 또는 자율성확보
  - > 프라임시간대 지역방송 편성비율의 제고추진
  - > 지역조성기금(시청료, 방송발전기금 등)의 지역배분 확대 등 재정안정대책 마련
  - > 디지털 무한경쟁시대 지역방송 경쟁력과 로컬리티 및 품질향상 위한 방송정책 수립

◎ 기타 건의사항

- ◇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교수단에 지방언론계인사 및 지방언론학자 30%이상 포함시킬 것
  - >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교수단 명단공개 및 지방언론계인사 및 지방언론학자 포함여부를 공개할 것
  - > 자문교수단에 개혁적 지방언론출신 인사 및 지방언론학자 50%이상 참여기회를 부여할 것.
- ◇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육성, 공영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합뉴스사법 제정
  - > 독점통신사의 위헌판결로 통신사 경쟁체제 도입으로 특정통신사를 위한 지원법의 문제대두
  - >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 등에 대한 연간구독료체결 등 법안내용에 문제있음.

5) 지방문화창달과 정보활성화를 위하여

- ◇ 문화관광부의 문화관련 사무를 지방으로 대폭이양하고 재원과 인력도 이양한다.
- ◇ 문화관련 국립기관과 인력의 서울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기관을 적지적으로 분산한다.
- ◇ 지방문화발전계획 수립 및 이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한 결정권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한다.
- ◇ 문화관광관련 국립기관의 운영이나 각종 기금운용위원회에 지역인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 > 기금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 또는 결정권자의 50%를 비수도권에 할당할 것.
  - > 잔존 기금의 기금 배분에 있어서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할당제 실시할 것.
- ◇ 교과과정을 지방의 역사,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 지방도 주체가 되는 정신을 교육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 ◇ 각 지역의 개성있는 문화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문화예술육성기본법 제정하여 지역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방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3. 지역균형발전법과 관련하여

#### 1) 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 ☐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신행정수도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함.
- ☐ 그러나 대통령 임기 중에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추진일정과 추진방법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임.

가) 신행정수도 건설은 투명한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투명한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함.

(i) 현 공약의 건설부 장관 소관의 「행정수도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 함.

- 후보지 선정 이전에 먼저 이전 규모, 방식,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건설부 장관 소관의 「행정수도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대신에 대통령 산하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함.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이외에 반드시 각 지역의 대표가 대다수 참여해야 함.

(ii) 당선 후 1년 이내에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 대통령 임기내에 신행정수도건설에 필요한 국민적 합의뿐 아니라 기본적인 인프라구축을 모두 끝내고 수도기능이전을 위한 법제도의 마련도 완료하여 신행정수도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해야 함.

나)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함. 아울러 국가개혁과제(특히 지방분권과 지역균형)와 연동하여 실시해야 할 것임.

- 행정수도 건설 방식을 일괄이전, 분산이전, 일괄분산병용(일부 기관은 타 지역으로 이전)등의 놓고 어떤 안이 바람직한가 신중히 검토해야 함.

- 행정수도 이전과 아울러 지방의 산업 흡인력과 경제 잠재력을 키우는 정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 즉, 행정 수도 이전과 아울러 지역균형발전법 등 획기적인 지방경제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정책 추진체계를 분권형으로 전환 해야 함.

다) 행정수도 건설 이전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선행하게 되면 수도권 집중이 더 가속화 될 가능성이 크

므로, 수도권 규제를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하여 풀어야 함.(행정수도의 건설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수도권도 성장관리 체계로 전환).

- 수도권의 동북아 허브 중심으로의 개발은 지역균형발전과 상호모순의 소지가 크므로 수도권 과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함.

## 2) 지역경제 육성 방안의 마련

### ◎ 공약 중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

☐ 노 당선자의 획기적인 지방의 육성방침과 이를 위한 국가균형위원회, 지방특화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을 환영함.

☐ 그러나 현 공약에는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지역균형발전기금 혹은 특별회계)과,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산업정책의 분권화 방안, 그리고 낙후 및 중소·농촌지역의 진흥방안이 빠져 있음.

☐ 아울러 인수위원회의 10대 국정 추진과제 중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분야」의 내용중에 지방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문화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음.

☐ 또한 신정부의 국정 개혁의 철학에 걸맞게 지역정책도 개혁되어야 하나, 지방의 육성의 의지만 있고 지역정책의 개혁의 방향은 빠져 있음.

- 예를 들어 각 부처별로 지방육성을 위하여 특별법안들 - 예를 들어 지방산업육성특별법, 지방과학기술육성 특별법 등 -이 제안되고 있는 바, 이 법안들은 지역균형발전법이란 기본법하에 하위법으로서 체계화되어야 하며, 기존에 지역관련 각종 법안도 이 기회에 통합화, 체계화되어야 함.

-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예관한법률, 도서개발촉진법, 농어촌정비법, 오지개발촉진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공업재배치법(현행 산업집적진흥법) 등으로 다양

- 지역균형 정책의 추진체계를 대폭 분권화해야 함.

- 최근 '지역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부처간에 상호 경쟁이 심하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보다는 관련 중앙부처의 육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보임.
- '지역균형발전법'의 주도권을 놓고 행자부, 재경부, 건교부가 경쟁하거나, 지역특화산업과 과학기술진흥을 놓고,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가 경쟁하거나, '농촌지역 정비' 정책을 둘러싸고 행자부, 농림부, 건교부가 경쟁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의 내용은 보이지 않음..

□ 아울러 최근 인수위원회는 각 지방별 발전 방안과 숙원 사업을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지역별 우선 사업을 점검하고 확정짓는 작업을 하고 있는 바, 이 과정에서 종래와 같이 지역 성장연합의 요구에 순응하여 개발위주의 대규모 국가 지원사업을 남발하지 말아야 할 것임.

◎ 제안 사항

가) 지역균형발전법의 조속한 제정

○ 추진 일정

- 현재 국회 재경위와 건교위에 회부되어 있는 법안들을 적당히 짜 맞추는 식으로 제정하지 말고, 법의 제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실효성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법이 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지역균형발전법은 늦어도 금년 하반기 이전까지는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 법의 제정을 위한 검토·조정위원회와 추진일정을 신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야 함.
- 관련 검토·조정위원회에는 반드시 지방인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되, 개혁적인 인사로 야 할 것임.

○ 법안의 내용

- 지역균형발전은 단일법 하나로만 그 의도하는 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으므로, 이 법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본법 성격의 내용을 담고,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개별법과 특별법을 개·제정하여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법제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 법안의 명칭으로서는 한정적 의미를 갖는 특별법보다는 ‘지역균형발전법’이 타당함.

- 아울러 본 법안이 선언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기본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률이 되기 위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성격 및 지위 규정이 반드시 필요함. 또한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도서개발촉진법, 농어촌정비법, 오지개발촉진법 등의 관련법도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이 법안에는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시책과 농촌의 종합적 발전 시책을 통합한 ‘종합적 지역정책의 틀’ 수립(이와 관련한 각종 정책 수단과 관련 법률의 통합화, 체계화).

- 통합화를 통해 효율성 제고
- 낙후지역의 집중적 투자
- 종합틀 하에 균형발전분야(수도권과 비 수도권)/지역경제 육성분야(지방산업 및 과학기술 육성, 지방금융 육성)/낙후지역과 중소도시·농어촌분야 등 3개 부문 대책을 수립

2. 부처 분산적인 정책 수단과 기능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제의 정비(중앙의 통합 추진기구 설립 및 지방의 지역발전통괄 독립기구 설립 등)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자금의 통합, 효율화 및 지원 자금의 증액(지역균형발전회계 설립 등)
4. 지방이 주체가 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 분권식 전략으로 정책 추진 방식의 변경과 지역정책의 대폭적인 분권화
5.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

#### 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추진 사항

##### ☐ 정책 추진체계의 통합

###### - 중앙의 지역균형발전추진을 위한 조직 및 기구

- 지역균형발전위원회(심의, 의결, 자문)와 지역균형발전기획단(집행기구)의 설치
- 지역균형발전을 통괄하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설립하되, 이 산하에 독자적인 범부처 실행기구를 두고 지역균형계획과 관련 지역균형발전 자금의 통괄 기능을 부여할 것(실무국은 지역인프라개발·지역산업·농촌개발 등 관련 실을 두고, 소관 분야별로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중심으로 운영).

- 각 지역별로는 영국의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와 같은 지역개발정책을 통괄하는 독자적 기구 관민협력의 제3섹터형 지역개발공사를 설립할 것.

##### ☐ 지역정책의 분권화

- 지역 산업정책, 농업정책, 과학기술정책 등도 분권화할 것.
-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EU나 '협약방식(단일종합지역계획; SPD)'나 프랑스의 '지역발전 계획 계약제도'를 도입할 것.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 특별회계의 운용주체, 재원규모 및 조달방법, 기금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등 법제도 마련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립함과 동시에, 이 기금 외의 각 부처의 지역개발 사업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것

##### ☐ 지방금융 육성

-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금융산업 육성의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 낙후지역 및 농어촌 육성 대책 수립

- 우리나라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쇠퇴가 심각함에도 농촌지역발전 문제는 지역균형발전과 별도 과제로 취급되어 왔음.
- 유럽과 같이 낙후 및 농촌지역을 지역 특성에 따라 나누고, 낙후정도에 따라 차등보조금 지원
- 아울러 지역의 잠재역량 개발(인적, 사회적 역량, capacity building)을 개발하고 상향식 개발방식을 보급하기 위한 실험적 사업으로서, EU의 소단위 농촌공동체 개발프로그램인 LEADER와 같은 프로그램의 도입을 검토 할 것.

□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농촌포함)을 수립.

-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농촌포함)을 수립하고, 또한 각부처별 부문사업(반도체 등 산업지원, 과학 기술진흥, 문화산업 진흥, 사회간접자본 투자)이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을 가져오지 않도록 조정.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가칭 "지역발전 지표" 를 개발하여 지역별 발전, 낙후 정도 를 객관적으로 계량화 할 수 있는 가시적 자료를 만들고, 계획의 지표를 삼도록.
- 이에 필요한 기초 통계의 정비(지역산업연관표, 시군구 별 지역국민소득 통계, 실업률 통계 등)